새정치 당권주자들 "호남 민심 잡아라"

문재인, 28일 나주 혁신도시 방문·박지원, 오늘 전남대서 특강

천정배, 광주에 연구소 개소…김동철·정세균·추미애 등도 잰걸음

내년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이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정치적 심장 역할을 하는 호남 민심의 지지를 통해 당권 경쟁 구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전략이다.

우선,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의원이 28일 나주 혁신도시를 방문하고 광주을 찾아 지역 인사들과 간담회를 할 예정이다. 문 의원 측에서는 '전국의 성장 동력 현장을 찾는 프로그램'이라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문 의원의 '당권 도전 프로그램'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호남 민심이 당내 주류인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 의원의 광주·나주 방문은 이를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문 의원 측 일부 인사들은 박준영 전 전남지사 등 명망 있는 지역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민심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지지를 토대로 호남 민심의 반노 정서를 최대한 완화하고 차기 당권 경쟁에서 연착륙하겠다는 전략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맞서 박지원, 박주선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출신 유력 당권 주자들은 '호남 정치력 복원'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호남 민심 지지 확보에 나서고 있다. 호남이 대권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최소한 당권을 잡아 정권을 창출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지원 의원은 26일 전남대 용봉홀에서 '호남정치 복원, 무엇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강연에서 박 의원은 비노·친노로 인한 독점과 분열의 악순환을 깨는 것이 최고의 정치 혁신이며 이러한 과제를 미래 지향적 자세로 매진하는 것이 호남 정치란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선 의원도 지난 16일 김대중센터에서 '호남정치 복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문재인 의원과 친노 진영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내며 각을 세웠다. 박 의원은 또 민생·민주·인권·평화라는 호남의 가치를 토대로 호남 당원이 직접 나서야 호남 정치가 복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외의 천정배 전 법무부장관도 27일 광주 상무지구에 동북아 전략연구원 부설 호남의 희망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존재감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는 장하성 교수가 정의로운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하고 천 전 장관이 인사말을 통해 차기 전당대회 등과 관련한 정치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 도전을 공식화 한 김동철 의원도 이달 초에 이어 다음 달에도 전남대에서 강연을 나서는 등 광주에서부터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다는 방침이다.

호남의 맏 며느리론을 내세우고 있는 추미애 의원도 27일 전남대 로스쿨에서 법과 정의를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삼보일배로 호남 민심에 강한 인상을 심어준 추 의원은 새정치연합 혁신론 등과 관련, 지역 인사들과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정세균 의원 등도 당권 도전 선언에 앞서 광주 방문 등을 통해 호남 민심의 주목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대 선거인단 구성비 싸고

새정치 계파별 '샅바싸움'

친노·비노·정세균계 '3인 3색' 시각차

내년 2월 전당대회를 앞둔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선거인단 구성비율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권리당원 자격요건을 둘러싼 제1라운드 대결이 별다른 잡음 없이 싱겁게 마무리된 반면, 차기 지도부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인단 구성비에 대해서는 계파 간 셈법이 첨예하게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준위 회의에서는 대의원, 권리당원, 일반당원·국민의 투표 반영비율에 관해 격론이 벌어졌다.

특히 친노(친노무현)계, 정세균계, 비노(비노무현)·중도파가 이 문제를 두고 '3인3색'의 시각차를 보여 합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우선 친노계는 일반당원·국민의 여론조사 비율을 30%로 하고 대의원(30%)과 권리당원(40%)의 비중을 70%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정세균계는 ▲대의원 50% ▲권리당원 30% ▲일반당원·국민 20%를, 비노계는 ▲대의원 30% ▲권리당원 50% ▲일반당원·국민 20%의 안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노계의 일반당원·국민 비중이 다른 계파보다 10%포인트 높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대중적 인지도가 높고, 당 바깥의 지지기반이 탄탄한 친노와 문 비대위원으로서는 일반당원·국민의 투표 반영비율을 올리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쟁 후보들은 일반국민의 투표 비중을 낮추고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권리당원과 대의원 사이의 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세균계와 비노 사이의 입장이 갈라져 논의가 복잡해지고 있다.

한편, 전준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2월 전당대회 투표에 참여할 권리당원의 자격을 '6개월 전 입당해 최근 1년간 3회 이상 당비를 낸 당원'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했다.

전준위는 권리당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일을 올해 12월31일로 잠정 확정했으나 지역 경선 일정에 따라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전준위가 채택한 기준에 따르면 새정치연합의 권리당원은 29만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준위는 이날 의결한 권리당원 자격을 이르면 26일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하고 당무위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日 신문기자 기소 대단히 잘못된 일"

문재인, 외신기자클럽 회견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은 25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에 대한 법리나 판례나 세계적인 기준과 맞지 않아서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 됐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이날 외신기자클럽 초청 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이 정권을 잡는다면 그런 고소를 하겠느냐'는 뉴욕타임스 기자의 질문에 "보도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경제정책에 대해 "아베노믹스를 따라가는 것"이라며 "경기부양 효과를 볼지 몰라도 다음 정부에 경제폭탄 떠넘기는 식의 무모한 짓"이라고 우려했다.

문 의원은 자신의 차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차이고 대선은 3년 이상 남은 상황이라 벌써부터 대선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대선에 관한 이야기는 1, 2년 정도 지나고 난 후에, 그때 박근혜 정부 후반기 가서 논의를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5일 오후 광주 YMCA 무진홀에서 지방자치정책연구원(원장 송경종)의 초청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안철수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의 정치돼야"

광주 지방자치정책연 초청 강연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5일 "국민과 함께하는 정치는 이념이나 진영 논리보다 생활정치며, 갈등과 대립을 화합과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통합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광주YMCA 무진홀에서 열린 지방자치정책연구원(원장 송경종)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를 주제로 한 이날 강연에서 "통일이 되기 전에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 스스로 결정하는 지방정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 주민투표 확대를 통해 주민들의 정치 참여를 대폭 넓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이양비율을 15%로하고,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앙정부의 입법을 제안하거나, 지방정부의 재원을 사용할 경우 지방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안 의원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주민안전사각지대 해소,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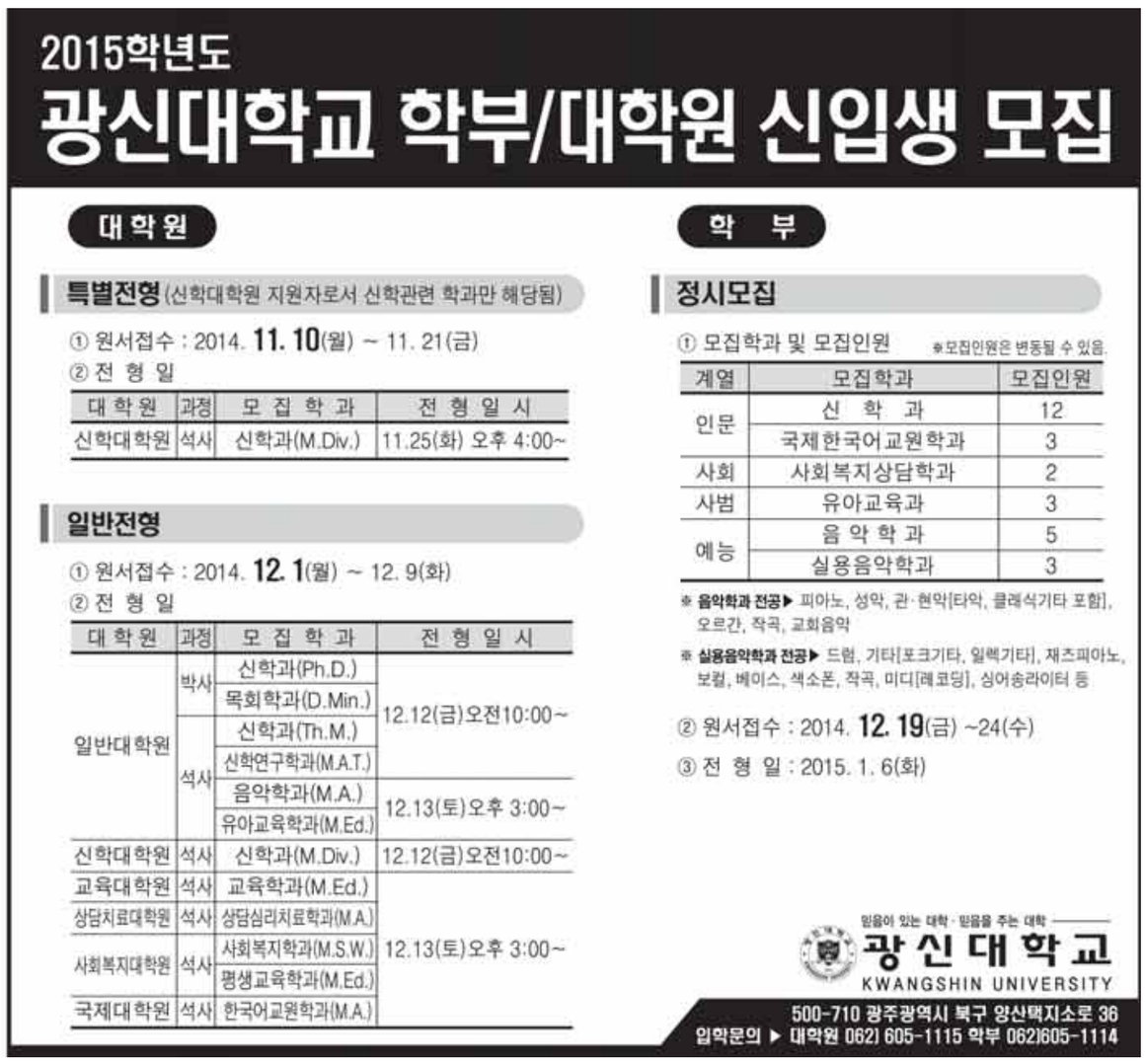
野 "수능 오류, 대통령 사과·황우여 사퇴를"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 등을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 가슴에 대못 박은 것은 누가 책임지는가. 대통령이 '미안하다', '사과한다',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해야 맞다"며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자진사퇴를 했지만 사퇴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교육당국은 피해와 혼란을 최소화할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며 "황 부총리는 이번 혼란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원인을 규명,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석현 국회부의장은 회의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출제오류가 발생한 것은 무책임을 넘어 횡포에 가깝다"며 "평가원장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 정부는 황 부총리 사퇴 및 담당자 처벌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